

비전·실행·혁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CREATING A BETTER FUTURE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기획예산처 미션과 목표체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Creating a better future

미션

Today & Tomorrow

사명의식

Think Tank

기관위상

Transparency & Trust

업무자세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

Two Track

정책기조

Ten Ten

추진전략

비전과
핵심가치
(5 TTs)

**전략적
자원 배분**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 한정된 국가 재원을 국가발전의 장기비전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최적 배분한다

**국민기본수요
형평 증진**

Meeting the basic needs of citizens

- 사회통합에 기반을 둔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회균등을 실현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

Assur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 대외개방과 경제통합에 따른 경기순환 불안정, 경제 위험요인 증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성과 중심
재정 운영**

Result-oriented fiscal management

- 재정을 투입한 공극적인 효과와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와 집행제도를 구축한다

**재정투명성
공공기관혁신**

Transparent public finance

- 국제기준에 맞게 공공부문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지속 향상한다

5대
정책목표
(SMART)

가장 일하고 싶은 부처 (Best Workplace)

혁신비전

한국의 장래를
책임지는 부처

인재양성의
요람

일과 삶이
조화되는 직장

목 차

[제1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06년의 의미]	3
I.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 평가	4
I-1. 재정의 역할 변천	4
I-2.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반성	6
II. 2006년 정책목표	13
III.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15
[비전]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 : 전략기획기능 강화	15
과제 1-1.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16
과제 1-2.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	17
과제 1-3.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18
과제 1-4.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19
[신뢰]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재정규율 확립	20
과제 2-1.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	21
과제 2-2.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22
과제 2-3.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강화	23
과제 2-4.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24

[혁신]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혁신

: 생산성·투명성 제고 25

과제 3-1.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26

과제 3-2.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선진화 27

과제 3-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28

과제 3-4.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9

IV.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30

IV-1. 2006년 혁신 추진방향 30

IV-2. 2006년 혁신과제 31

1. (민원제도 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표적 주민
참여 행정모델로 발전 32

2. (정책홍보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33

3. (정책품질관리) 「균형발전 지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시책 정책품질관리 강화 34

4. (일하는 방식 개선) 부처와 재정당국간의 예산협의 모델
개발 35

5. (전자정부 구현)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36

[제 2 부] 성과측정 추진계획	37
---------------------------	----

[별 첨]

1. 2006년도 입법추진계획	63
2.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69
3. 참여정부 이후 신규·계속·폐기 정책	75
4.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상황점검	87
5. 2005년 정책목표 추진성과	91
6. 재정연대표(정부수립~현재)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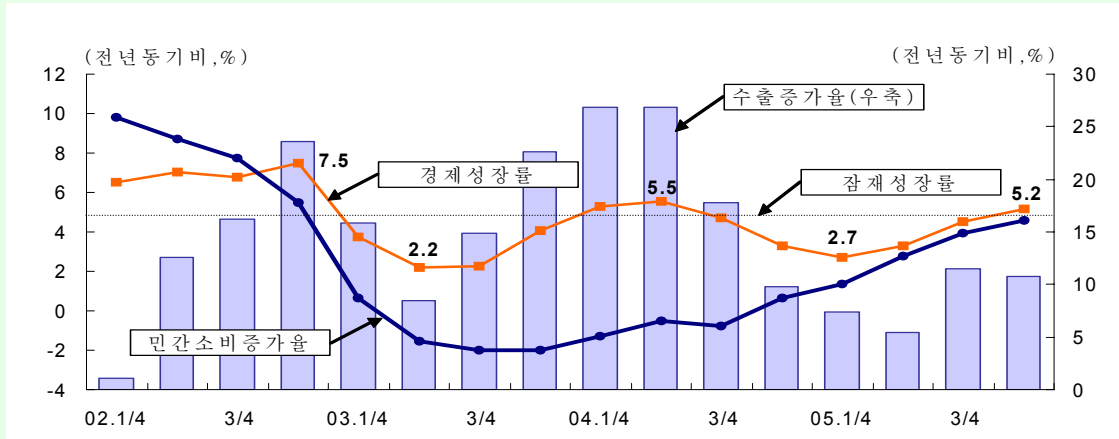
[제 1 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06년의 의미

① 대내외적 여건이 지난 3년보다 점차 개선되는 추세

○ 경제는 내수와 수출 증가로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 사회적 갈등요인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방폐장 건설 등의 문제들이 해소된 상태

○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와 환율·유가·노사관계 등 불확실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상존

② 2006년에는 경제활력 지속, 국민통합 등 국정과제의 실천, 고령화·양극화 등 장기과제의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둘 필요

○ 경기회복 추세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국민연금법·비정규직 입법 등 추진중인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우리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

○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장기·구조적인 문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 전략적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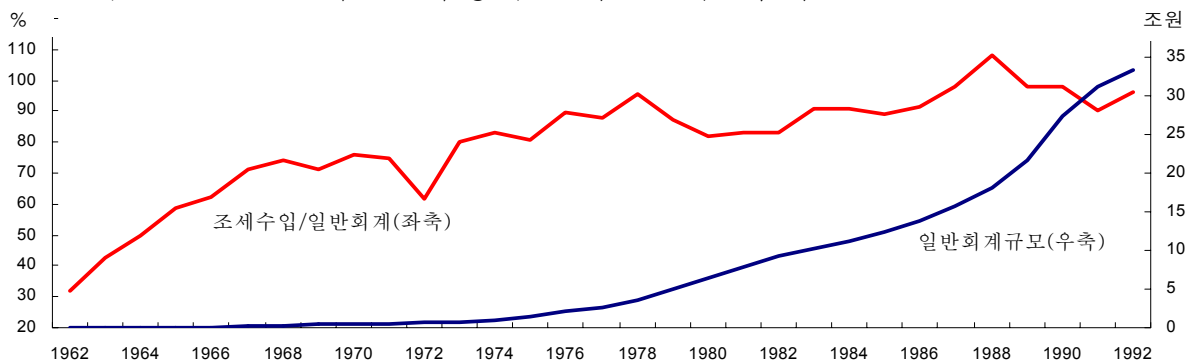
I.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 평가

I-1. 재정의 역할 변천

- ◇ 그동안 재정은 고도성장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두차례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
- ◇ 최근 잠재성장률 저하와 함께 복지 등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상황
- ⇒ 60~70년대의 국가기획(nation planner) 기능을 미래에 대비한 비전제시(vision provider) 기능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

Ⅰ 국가주도 경제개발 시기('62~'92)

- 국가가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총동원
(내·외자, 정책금융 등)하여 경제개발에 집중
 - ('62~'88) 자원 배분계획(allocation plan)을 통해 1~4차 계획은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80년대 5차계획 이후 사회개발도 추가
 - ('89~'92) 민주화선언 이후 유도형 계획(indicative plan)으로 전환하여 민간주도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실효성 미약
- 고도성장과 함께 재원의 70%를 차입하던 세입구조가 자립구조로 전환되고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



○ 국가주도 경제사회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의 자생적 발전이 지연
- 성장과정에서 희생된 삶의 질 문제를 인식하였으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

② 민간주도 전환 시기('93~'02)

○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직접개입(통제)에서 민간의 창의를 강조하고 국가기획 기능 자체를 축소

- ('93~'97) 국가기획 담당부처를 폐지하고 대외개방·규제 완화를 강조한 반면, 경제·사회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연
 - * 외환위기 이후 타율적 구조조정에 따라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 (예: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168조원 투입)
- ('98~'0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현안과제의 해결에 주력

◇ 90년대 이후 10년간('93~'02) 재정이 전략적인 기획기능 없이 운용됨에 따라 장기·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

< 국가전략 기획기능 변천 >

	국가주도 경제개발			민간주도 전환시기			참여정부
	'62	('82)	'92	'93	('97)	'02	'03
	1~4차 5개년 계획		5~6차 계획	신경제5개년 계획		외환위기 극복	국정과제 로드맵
1인당GNI(\$)	87 → 1,893		→ 7,527	→ 11,176		→ 11,499	→ 14,162(04)
계획 성격	자원배분계획		유도형 (시도)	기획기능 축소		단기현안대책	분야별 비전

I-2.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반성

I-2-1. 전략적 재정운용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도입

- 재정운용의 시계를 확대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 개최('05.4), 재정지출 12대 원칙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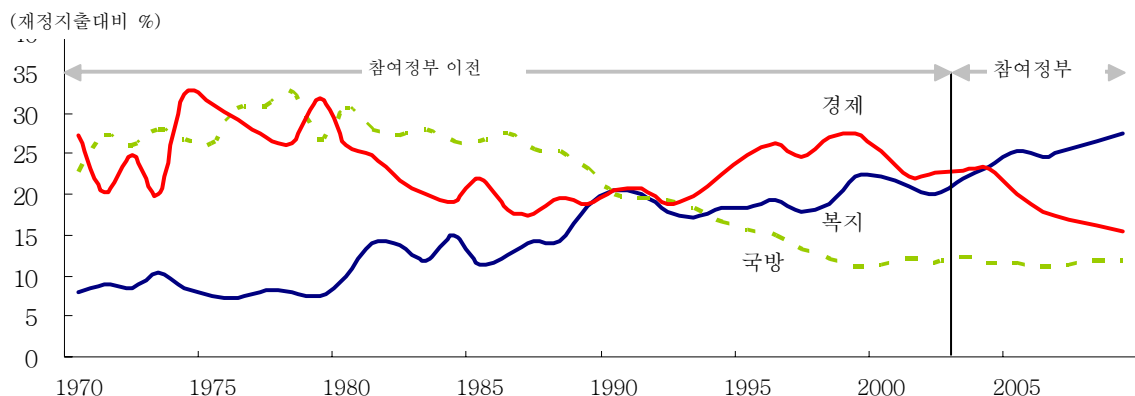
-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 세출구조조정 : ('05) △2.4조원, 5.6% → ('06) △4.2조원, 9.3%

② 재정지출구조의 전환과 경제회복 기여

-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 에너지가 확대 재생산되도록 복지분야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

- 경제분야는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추진



- 조기집행, 추경 등 탄력적 경기대응을 통하여 경기진폭을 축소하고 경기회복에 기여

* 추경의 성장률기여(%p) : ('03) 0.6, ('04) 0.2, ('05) 0.3

* 조기집행의 상반기 성장률 기여(%p) : ('03) 0.2, ('04) 0.7, ('05) 0.4

③ 국정과제 로드맵의 체계적 지원

-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분야별 로드맵을 재정 측면에서 차질 없이 지원
 - * (예시) 균특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인상 등 균형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뒷받침
- 분야별 로드맵을 포괄하는 장기비전과 재원대책 수립을 위해 기획예산처를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조직개편('05. 5)

미흡한 점

①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효율성 향상 미흡

- (구조조정 한계)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집단화, 정치적 이해 등으로 국민체감 효과는 미흡
- (과급효과 미흡) Top-down 제도에 의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이 부처나 국회까지 확산되기에는 부족
 - * 3년 연속 12월말 예산안이 의결되는 등 헌법상 재정원칙도 미준수
 - 예산안 통과 : ('03) 12. 30, ('04) 12. 31, ('05)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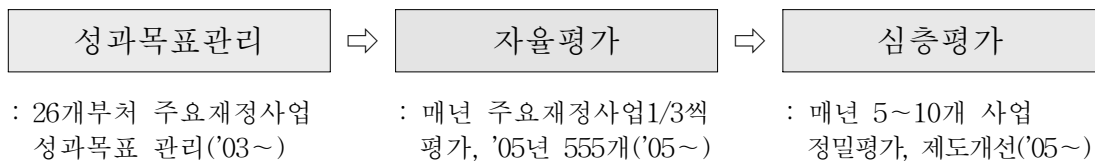
② 재정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에는 한계

- 국가채무·감세논쟁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에 대한 인식전환에는 미흡
 - * '05. 8월이후 국가채무, 적자 등 300건 이상의 재정관련 기사 게재
- 대규모 세수결손 반복 발생 등에 따라 불안요인 가중
 - * 세수 결손(조원) : ('03) △0.3, ('04) △4.3, ('05) △4.3(잠정)

I-2-2. 재정제도 혁신

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Top-down제도 도입에 상응한 부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부여·자율평가·심층평가 형태로 성과관리를 체계화



- 연례적·반복적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종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 43개 중앙부처, 250개 지자체, 12개 공기업에 '예산낭비신고 센터' 설치·운영하고,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②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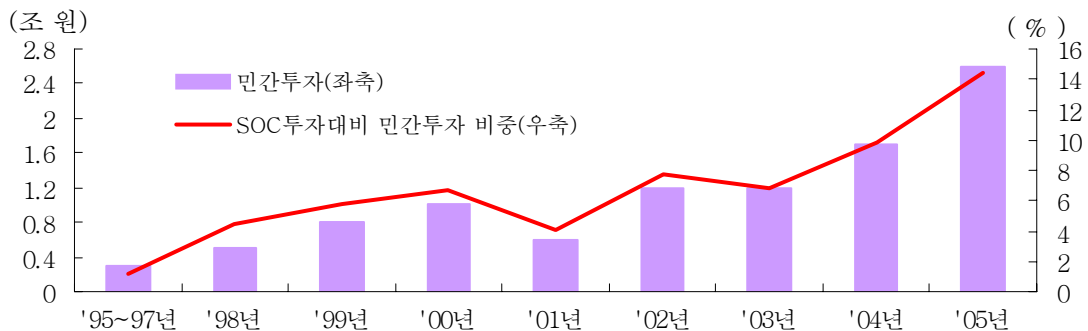
- 중앙·지방·공기업·산하기관의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분석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중
 - * '06년 시험운영후 '07년부터 시스템 가동 예정
- 국민들이 나라살림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가 용이하도록 사업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개편완료
 - * '07년 예산부터 프로그램 체계를 적용한 예산서를 작성·제출
- 예상되는 기대효과
 - 공공부문 재정정보의 통합분석처리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성과관리가 용이하고 유사·중복사업의 예산반영을 방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

③ 재정투입 방식의 다양화

-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편익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을 신규 도입

* '05년 BTL사업 도입실적 : 86개 사업 3.8조원 고시

- 민자 활성화에 따라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10%를 상회



미흡한 점

①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미진

- 부처의 인식·전문성 부족으로 유용한 성과정보를 얻는데 한계
 - 단순한 예산투입·산출규모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거나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다수
- 예산낭비 대응에 대한 국민참여 부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미흡

②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미흡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 지연
- 국민연금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보험료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 직면 가능성

I-2-3. 공공기관 혁신

① 경영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 ‘경영정보 포털’ 구축으로, 국민에 의한 직접 감시체계 가동
 - 314개 전체 공공기관의 사장연봉, 경영평가결과, 재무제표 등 20여개 항목을 공개
- 경영평가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03.12)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기관수(개)	25	18	55	144 ¹⁾
예산(조원)	9.5	40.6	57.8	175.3

1) 투자기관(14) + 출연연구기관(42) + 산하기관(88)

-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혁신지원 활동을 강화
 - 혁신평가체계 구축, 혁신교실 운영, 혁신매뉴얼 개발·보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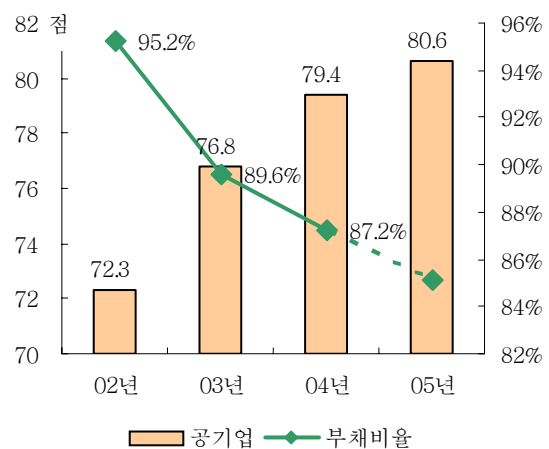
② 성과·고객중심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 및 재무건전성 제고

-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 공기업 고객만족도
: (’02) 72.3 → (’05) 80.6점

-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재무건전성도 매년 개선

* 부채비율
: (’02) 95.2 → (’04) 87.2%



③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지배구조 혁신방안 마련

- 상업성, 공공성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
 -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 * 비상임이사 비율 확대, 비상임이사·감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
- 정부의 감독기능을 집중화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미흡한 점

①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으로 국민 불신 미해소

- 과다 임금인상, 직원자녀 채용상의 특혜, 퇴직자와 수의계약 등
 - * 정부지침 평균('02~'04): 4.7%, 실제 평균 인상률('02~'04): 9.1%
- 행담도 개발, 러시아 유전개발 등 비관련 사업 참여

② 일부기관 특례 적용으로 공공기관의 엄정한 감독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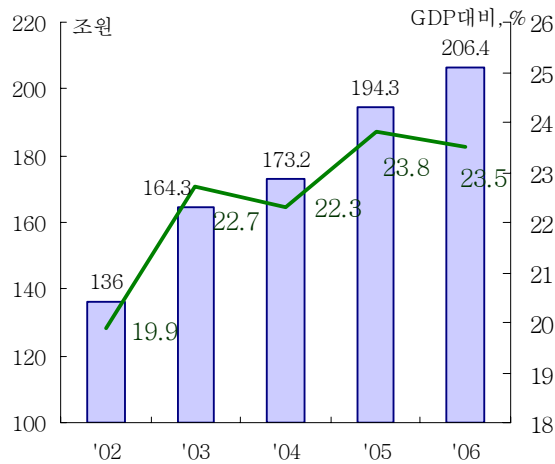
- 다수 기관이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민영화법 적용기관(가스공사, 인천공항, 한국공항), 금융기관 등
-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각기 다른 형태로 법적용
 - * (예시) : 한전(정투법), 가스공사(민영화법), 지역난방공사(정산법)

③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조속한 제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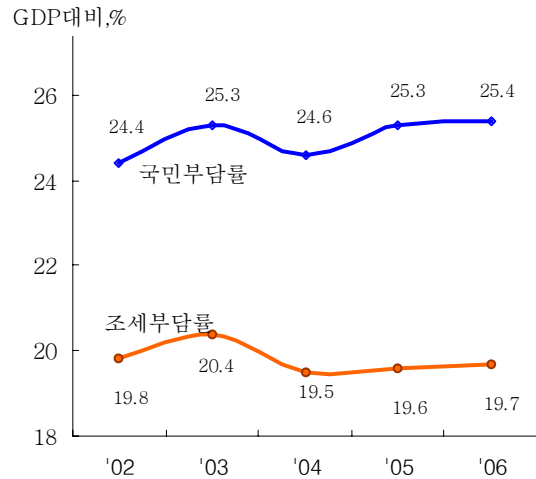
- 내부 경영진 견제장치, 경영정보 공개 강화 등의 법제화 등

【참 고】 참여정부 기간중 주요 지표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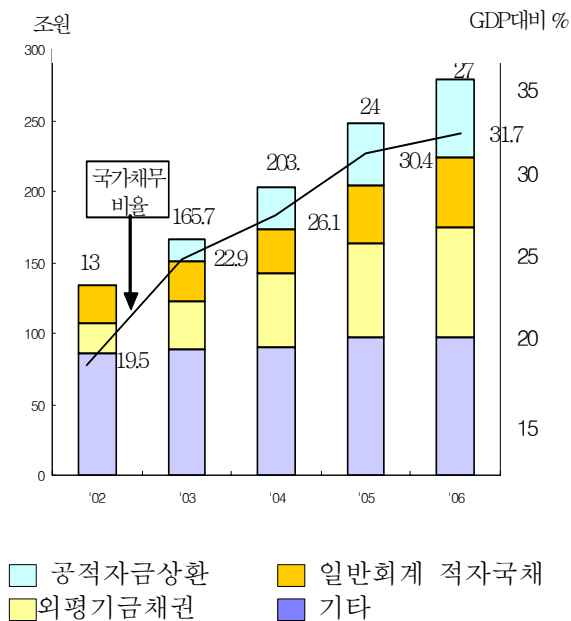
① 통합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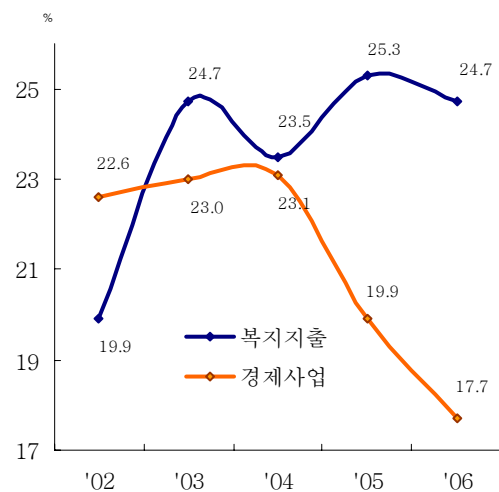
② 조세·국민부담률



③ 국가채무와 증가요인



④ 주요부문 재원배분



II. 2006년 정책목표

- ☐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Creating a Better Future)
비전, 신뢰, 혁신을 '06년 정책목표로 설정

비전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 : 전략기획 기능 강화

-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를 제시할 필요

⇒ 20~30년의 장기비전 수립, 전략적 재원 배분, 한국형 복지
재정모델 모색,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등 추진

신뢰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재정규율 확립

-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전반에
대한 낭비요인 제거 필요

⇒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혁신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혁신 : 생산성·투명성 제고

- 장기적인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공공기관 운용체계 선진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기획예산처 미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Creating a better future)



▶ '06년 3대 정책목표

<비전>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
⇒ 전략기획기능 강화

<신뢰>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재정규율 확립

<혁신>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혁신
⇒ 생산성·투명성 제고



▶ '06년 분야별 이행과제

①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①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 추진	① 공공부문에의 시장 원리 확대
②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	②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②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③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③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강화	③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④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④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④ 재정위험요인 분석 및 재정위험지표 개발

Ⅲ.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목표 1
: 비전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
: 전략 기획기능의 강화

과제 1-1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과제 1-2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

과제 1-3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과제 1-4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과제 1-1.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 필요성

- 일자리, 연금, 의료비 등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우려
- 장기비전을 통해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를 제시할 필요

□ '06 추진계획

① 한 세대(20~30년)를 내다보는 장기비전 수립

- 미래 환경변화 예측 및 국가발전 시나리오 제시
- 장기비전(슬로건) 및 정책목표 구체화

② 장기적·전략적 재정정책(strategic fiscal policy) 수립

- 시스템 혁신 : 복지제도 개혁, 정부와 시장간 역할분담 등
- 선제적 재정투자 : 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수요 충족 등

③ 장기재정전망 추진

- 계량모델을 수립하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거시재정모델), 제도개선의 민감도(복지·교육재정모델) 분석

□ 추진일정

- 장기비전,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상반기)
-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하반기)

◎ 성과지표 : 장기비전과 재정의 연계 정도

과제 1-2.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

□ 필요성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 수립으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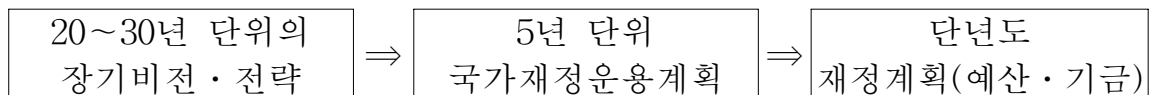
□ '06 추진계획

①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변동요인을 반영
(예) 희망한국 21, 국방개혁 등 새로이 제기된 재원소요

②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초로 '07년 재원배분

- 장기비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단년도 투자소요 반영
< 국가과제 설정과 재정운용에의 반영 시스템 >



③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7년 재원배분과정에서

각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 추진일정

- 분야별 공개토론회 및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의 개최(상반기)
-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2/4분기)

◎ 성과지표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7년 예산의 연계정도

과제 1-3.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 필요성

○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의 가속화 예상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06 추진계획

① 장기 복지지출 적정규모 추계모형 개발

- 국민소득,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 복지재정 추계모형 개발

② 복지제도 장기 개혁방향 검토

- 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 실태 분석을 토대로 개혁방향 도출

	총지출 /GDP (’05)	복지지출 /GDP (’01)	국가채무 /GDP (’05)	고령인구 비율 (’00→’50)	출산률 (’90→’02)	삶에 대한 만족도 (’99~’02)
한 국	27.7	6.1	24.0	10→55	1.60→1.17	47.3
호 주	35.5	18.0	17.4	18→40	1.91→1.75	77.2
스웨덴	57.4	28.9	61.4	27→47	2.13→1.65	79.6
핀란드	51.0	24.8	54.7	22→46	1.78→1.72	84.3
OECD	40.7	21.2	78.1	21→47	1.86→1.60	70.6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05.10), OECD Social Indicators(’05.3)

□ 추진일정

- 주요 국가의 복지시스템 및 개혁동향 분석(상반기)
- 장기 복지지출 적정규모 추계모형 개발(하반기)

◎ 성과지표 :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과제 1-4.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 필요성

- 방과후 활동, 사회적 일자리 등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 형태로 분산·운영 → 사업간 연계 부족 및 국민체감도 미흡

* 사회적 일자리 : 8개 부처 20개 사업, 방과후 활동 : 4개 부처 5개 사업

□ '06 추진계획

① 사회서비스 국민체감도 제고방안 마련

- 사회적 일자리, 방과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대 상	목 적
i) 사회적 일자리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ii) 방과후 활동	학령기 아동·청소년	교육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iii) 대체복무자 활용	징집대상 청년인력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iv) 박물관,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국·시립 박물관, 도서관	국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②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단」 설치

- 복지부, 노동부, 기획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
- 다수부처 관련 사회서비스의 기획·조정 및 지원대책 수립

□ 추진일정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단」 설치('06.4월)
- 국민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상반기) 및 관련사업 추진(하반기)

◎ 성과지표 : 방과후 활동 수혜율 5% 이상('05년 1.5%)
사회적 일자리 13만명 이상('05년 7만명)

목표 2
: 신뢰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재정규율 확립

과제 2-1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

과제 2-2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과제 2-3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강화

과제 2-4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과제 2-1.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

□ 현 황

- '06년 예산편성시 9.3% 지출구조조정 추진

	'05 예산	'06 예산
▶ 구조조정 대상지출(조원)	42.7	44.8
▶ 구조조정 실적(조원)	△2.4	△4.2
▶ 구조조정률(%)	5.6	9.3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계속 발생 →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필요

□ 추진방향

①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경제 분야(교통·농림·산업 등)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
-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② 국가채무는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30%이하 수준에서 관리

*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국가채무 기준 : GDP대비 60% 이내

□ 추진일정

- 4월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및 지출한도 결정시 세출조정방안 마련
-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7 예산안에 동 내용 반영

◎ 성과지표 : 국채발행규모, GDP대비 비율 및 세출구조조정실적

과제 2-2.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성과목표 관리) 일부 부처(26개)의 주요 재정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처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곤란
 - 인건비, 경상적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등 제외
- (자율평가) 예산편성 활용위주로 운영되어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는 미흡
- (심층평가) 부처 참여 없이 기획처 주관으로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

□ 개선방안

- ① 성과목표관리 대상 확대 및 정부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
 -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 → 전부처, 모든 재정수반사업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지침」 수립, 성과관리 교육 확대 등 추진
-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PART) 보완·개선
 - 성과등급과 함께 제도개선 권고사항 제시
→ 부처의 자율예산편성 활용과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 유도
- ③ 재정지출 급증사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대폭 강화
 - 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복지 등 재정지출 급증사업 등을 심층평가 → 실질적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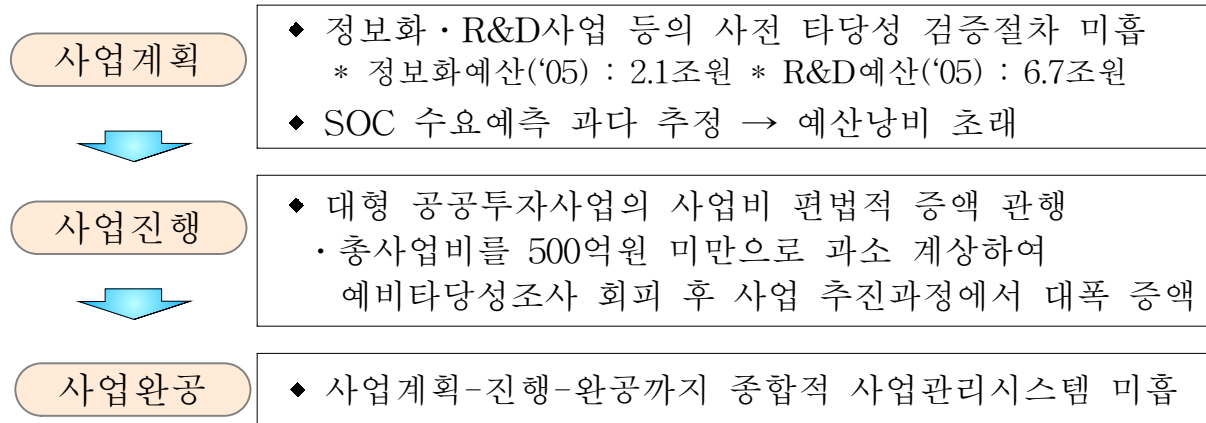
□ 추진일정

- 1/4분기말 시행지침 통보 및 심층평가 대상과제 선정

◎ 성과지표 :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평가

과제 2-3.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 (현행) 대규모 공사 → (변경) 대규모 정보화·R&D 사업 추가
- 객관적인 사업비 추정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부처의 요구규모와 관계없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② 수요예측 재검증 의무화 제도 도입

- 향후 상당한 수요변화 예상시에는 재검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검토 또는 시행시기 조정 추진

③ 대규모 투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진행-완공」 등 전 과정에 대한 Data Base 구축

□ 추진일정

-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하반기)

◎ 성과지표 : 대규모 투자사업 제도개선방안의 확산여부

과제 2-4.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 현황 및 문제점

- '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으나 학교 복합화 시설과 같은 수준 높은 서비스 시설은 제공하지 못함
-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부담의 증가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운영수입보장소요 : ('02) 2개 659억 → ('05) 6개 1,578억원

□ 개선방안

① 제안비용보상제 도입 등 BTL사업 경쟁 촉진 및 내실화

* BTL사업 규모 지속확대 : ('05) 3.8 → ('06) 8.3조원(고시기준)

② BTL사업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 학교 복합시설 시범사업 발굴 및 모델화
- 교육·문화·복지시설 유형별로도 표준모델 정립
- * 실시협약안, 성과요구수준서 등의 상세화·표준화 등

③ BTO 사업의 운영수입보장은 축소 또는 폐지

-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준 및 보장수준 대폭 축소
-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 조항을 폐지

④ 중장기 민간투자 종합추진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민자사업 발전전략 수립

□ 추진일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운영수입보장 개선) 추진(1/4분기)
- 유형별 표준모델 정립(2/4분기),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발굴(3/4분기)

◎ 성과지표 : 임대형 민자사업(BTL) 유치규모와
민간투자제도 개선건수

목표 3
: 혁신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혁신
: 생산성·투명성 제고

과제 3-1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과제 3-2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과제 3-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과제 3-4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과제 3-1.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MTMs*) 확대

* MTMs(Market Type Mechanisms, OECD 정의) : 가격·경쟁·선택 등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된 정부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 민자유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관심
- 그러나, OECD 선진국에 비해 대상 분야, 운영방식 등이 제한되어 있고 체계적인 추진시스템도 미구축

	아웃소싱	바우처	민자유치
우리 나라	▪ 단순업무 위주로 적극활용 ('99~'05년간 예산 연평균 24% 증가)	▪ 문화공연, 직업훈련 등 일부 분야에서 활용(아직 '걸음마 단계')	▪ SOC외 학교, 문화 시설 등에도 활용
OECD 선진국	▪ 단순업무 외에 정부 고유업무에서도 활용	▪ 사회복지·주택 등의 분야에서 활용	▪ 상 동

□ 개선방안

① 정부 전체 직무분석을 통해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

- 아웃소싱 : 법률자문, 재무·회계 등의 분야로 대상 확대
- 바우처 : 주택,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도입 검토
- * 민자유치 제도는 활발한 이용단계이므로 운영 내실화에 초점

② 운영방식 다양화

- 아웃소싱 : 민간부문내 경쟁 → 민·관 경쟁시스템으로 전환
- 바우처 : 쿠폰 지급/미지급, 비용환급 등 여러 형태로 도입

③ 추진시스템 구축

-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 설치(기획예산처 소속, 민간전문가 등 참여)
- 법·제도적 기반 마련(국가재정법, 예산집행지침 등에 근거 규정)

□ 추진일정

- '06년 개선방안 구체화(~'06.10월) → '07년부터 확대 도입

◎ 성과지표 : 시장원리 확대부처 비중

과제 3-2.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선진화

□ 현 황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마련 ('05.11월)
 - 공공기관 유형 재분류, 외부평가·감독기능의 일원화, 내·외부 견제기능 보장 등 종합적 운영체계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완료 ('05.8 ~ 12월)
 - 인사(정원, 임원급여 등), 재무(예·결산, 재무제표, 지분현황 등), 외부평가(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감사결과) 등 20여종 정보 공개

□ '06 추진계획

- ① 「(가칭)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내부 경영진 견제장치 보장, 총괄 감독기구 설치·운영 등
-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 직원 평균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핵심 공개정보 추가 발굴
- ③ 공공기관의 혁신관리 강화
 - 1사 1 혁신브랜드 창출, 혁신과제별 실명제, 혁신학습 등

□ 추진일정

-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추가 정보공개(3/4분기), 갱신(연중)

◎ 성과지표 : 기본법 제정을 위한 쟁점해소 노력 및 달성도*, 경영정보 공개 대상수, 혁신프로그램 만족도

* 동 법안은 부처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과제로서 이견 최소화를 위한 의견수렴 자체가 핵심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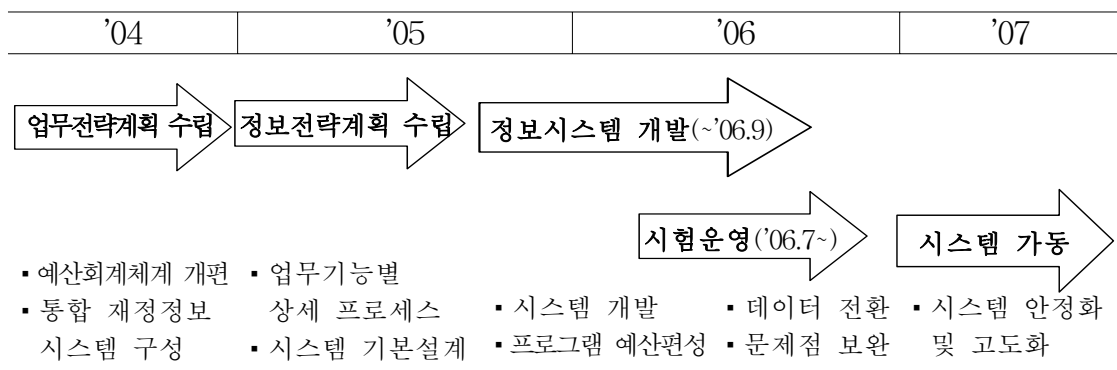
과제 3-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현황

- 참여정부 재정혁신 과제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결정 ('04.3월, 국정과제회의)
- 시스템 핵심과제 확정 및 추진방안 마련 ('04.12월)
 - ① 재정통계 작성범위 재설정,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③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효율적 도입, ④ 국가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화 설계를 거쳐 시스템 개발 착수('05.10월)

□ '06 추진계획

- ①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따라 '07 예산안 편성
 - 현행 통제위주의 품목별(line-item) 예산체계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개편
- ②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완료 및 시험운영(4/4분기)



□ 추진일정

- 시스템 개발 ('06. 1~9월)
- 시스템 시험운영 ('06. 10~12월) → 시스템 가동 ('07. 1월 예정)

◎ 성과지표 : 시스템 구축 완성도

과제 3-4.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필요성

- 미래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제도의 확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재정의 장단기 위험요인이 증가

→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재정위험요인 예시 : 공적연금, 사회보험, 노인수발보장제도, BTL 등

□ '06 추진계획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

*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시계 : 미국 50년, 영국 30년, 호주 30년

- 성장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재정의 단기 위험요인 분석

② 재정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위험 단계별로 구분, 대응계획 마련

□ 추진일정

- 장기전망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상반기)
- EWS 구축, 단기 재정위험요인 분석 (하반기)

◎ 성과지표 :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시스템 구축 진척도

IV.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IV-1. '06년 혁신 추진방향

□ 그간의 성과와 한계

- '04년 Top-down제도 도입 등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선도부처에 진입 (혁신 5단계)
- '05년 들어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 기획본부 만들기' 추진 (혁신 5단계 유지)

* 비전 설정(4월) → 전면 조직개편(5월) → MI 선포(6월)
→ 내부 성과관리시스템(tt모델) 구축(8월) → 학습조직화(10월)

⇒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다소 미흡

□ '06년 혁신 추진방향

- 고객(국민/부처)이 혁신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 : 기획예산처의 대표 브랜드화

<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

- ① BTL 사업을 대표적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
- ②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 ③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시책 성과관리 강화
- ④ 부처와 재정당국간의 예산협의 모델 개발
- ⑤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국가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기획본부로서의 역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인재의 확보·양성

⇒ 『Best Workplace』 (가장 일하고 싶은 부처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IV-2. '06년 혁신과제

과제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표적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 (민원제도 개선)

과제 2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정책홍보 혁신)

과제 3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시책
정책품질관리 강화 (정책품질관리)

과제 4 부처와 재정당국간의 예산협의 모델 개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5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구현)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표적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 (민원제도 개선)

□ 필요성

- BTL사업은 교육·복지 등 지역밀착형 공공시설이 대부분
→ 지역주민 참여를 높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
- * 영국 BTL사업은 학교, 공공병원 등의 사업계획·사업자 선정·서비스 평가 과정에 교사, 학생,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

□ '06 추진계획

① 사업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실수요자 의견 수렴

-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주민참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시설규모·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학교 신개축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적극 파악하여 학교 복합시설 BTL사업 활성화

② 평가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강화

- 민간사업자(SPC)의 운영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켜 실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
- * 민원·제도개선 매뉴얼을 활용, 주민참여 방안을 제도화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추진일정

- BTL사업에 주민참여도·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 연구('06년 2/4분기)
- BTL 사업지침, 타당성조사 매뉴얼, 표준협약안 등에 가이드라인 제시 ('06년 3/4분기)

◎ 성과지표 :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및 시행비율

2.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정책홍보혁신)

□ 필요성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낮아
신고접수 실적이 떨어지는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 * 12월말까지 305개 센터로부터 664건의 신고 접수(센터당 2.2건)

□ '06 추진계획

- ①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낭비 감시체계 구축
 - 시민단체 중심의 정례포럼 구성·운영
- ② 기획처 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06.1월)
 - 예산낭비사례 전화·인터넷 신고에 대한 상담 및 현장점검
- ③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 방송광고(TV, Radio) 및 재정 신뢰회복 캠페인 등 실시
- ④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및 문화상품권 지급
 -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05.12월)으로 예산낭비 신고자도
최고 3,900만원까지 성과금 지급 가능

□ 추진일정

- 예산업무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06.1월)
- 재정 신뢰회복 캠페인 등 홍보 프로젝트 마련('06.1/4분기)
 - * 온라인(2월), 공중파 광고(3월), LED(2~4월), 라디오(2~3월) 등
- 시민단체와 정례 간담회 및 낭비사례공유 등('06.2~4월)
- 예산절약사례 발표 대회('06. 4/4분기)

◎ 성과지표 : 재정신뢰도의 개선도

3.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시책 정책품질 관리 강화 (정책품질관리)

□ 필요성

-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수 부재
- 전 국민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참여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알기 쉬운 지표 필요

□ '06 추진계획

- ①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수 개발
 -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삶의 질 차원의 종합적 지수 개발
 -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와 워크숍 개최
- ② 균형발전 수준 진단 및 정책품질관리 수단으로 활용
 - 국가전체 및 지역별 균형발전 수준 진단 → 정책방향 제시
 - 재정투자계획의 입안·집행·평가 단계별 성과관리에 활용
- ③ KDI, World Bank와 공동연구 통해 국제적 지수로 발전
 - 균형발전수준 국제적 비교평가 → 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
 - World Bank 및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추진일정

-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06. 2~7월)
- KDI, World Bank와의 공동연구 및 대국민 공표 ('06. 하반기)

◎ 성과지표 : 「균형발전지수」 개발 및 지자체·전문가 만족도

4. 부처와 재정당국간의 예산협의 모델 개발 (일하는 방식 개선)

□ 필요성

- '03년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등 자율과 분권에 입각한 부처 중심의 예산편성 추진 중
→ 내외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 필요
 - * 55개 전부처 예산담당자(275명)에 대한 설문조사('05.11)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긍정적, 88.0%)
 - 개선이 필요한 부분 : 합리적인 지출한도 설정, 부처 의견수렴, 기획처의 재정혁신에 대한 인식
- 예산편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절차를 효율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

□ '06 추진계획

- ① 현 예산편성·협의과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예산연찬회, 각 부처 설문조사, 업무공유방 등 활용
- ② 정책품질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과정 혁신방안 마련
 - 부처와의 역할·책임 분담체계 명확화 → 중복적 업무부담 해소
 - 일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화하여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업무표준화, 프로세스 개선 및 상하간 권한·책임 명확화 추진

□ 추진일정

- 부처 의견수렴, 용역발주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준비 (1/4분기)
- 예산협의 모델 개발 및 예산편성 과정에 적용 (2/4~3/4분기)
- 설문조사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평가 (4/4분기)

◎ 성과지표 : 부처·기획처 직원 만족도

5.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구현)

□ 필요성

- 현행 시스템은 부처별 수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축·운영
→ 표준화 결여로 정보의 연계·활용 곤란
 - * 예산편성시스템(Fimsys, 기획처), 예산집행시스템(Nafis, 재정부), 지방재정시스템(Lfis, 행자부), 국방재정시스템(Ndfis, 국방부) 등
- 제공 정보도 단순 집계처리기능 위주
→ 재정위험요인 등 재정영향에 대한 분석·예측·가공능력 결여
- 지방재정, 공공기관재정 등 공공부문 재정정보 미비
→ 국가 전체의 전략적·효율적 자원배분에 한계

□ '06 추진계획

- ① 개별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구축
 - 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통합(Fimsys + Nafis)
 - 지방재정·국방재정·교육재정·공공기관재정 등 독자시스템 연계
 - 모든 재정 프로세스(세입,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정보와 재정분석정보를 수요자 요구에 따라 산출·제공
- ② 세계적 성공사례로 구축하여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2004년도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안 마련시 World Bank 공동 참여

□ 추진일정

- 시스템 개발(~'06.9월), 시험운영('06.4/4분기) → 시스템 가동('07.1월)
- 국제기구(World Bank 등), 해외 홍보('06.하반기)

◎ 성과지표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완성도

[제 2 부]

성과측정 추진계획

I. 정책과제별 이행과제

과제 1-1.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장기비전과 재정간 연계 정도

	'01	'02	'03	'04	'05	'06	'07	'08
■ 비전·재정간 연계 정도	-	-	-	-	-	50	60	70

(%)

□ 성과지표의 정의

- 장기비전에서 제시된 핵심정책과제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단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도

< 계산식 >

* (재정에 반영된 비전사업 수 / 비전에서 제시된 사업 수) × 100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비전 및 재정전략은 연금제도 개혁 등 제도혁신뿐만 아니라 저출산, 양극화 등 극복을 위한 재정이 필수적으로 수반
- 이번 작업은 세대간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부처간 의견대립이 예상되어 과반수 이상 반영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6. 10월 국회에 제출될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및 '07예산안에 반영된 비전관련 사업 수와 비전에서 제시된 사업 수 측정

과제 1-2.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자원배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7년 예산의 연계 정도

	'01	'02	'03	'04	'05	'06	'07	'08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7예산안에서의 지출규모 상위 50%분야 일치 비율	-	-	-			100		

□ 성과지표의 정의

- 지출비중이 큰 상위 50%에 속하는 분야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7년 예산안에서 일치하는 비율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 실현을 위해 중기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방향, 지출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일치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7년 예산안 국회제출시 자원배분구조 비교·분석하여 검증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간 총지출규모 상위 50%비율 해당 분야 중 '07년 예산안의 총지출규모 상위 50%비율 해당 분야 일치 비율

과제 1-3.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한국형 복지재정모델에 대한 전문가 평가

	'01	'02	'03	'04	'05	'06	'07	'08
▪ 전문가 평가	-	-	-	-	-	3.5점	-	-

□ 성과지표의 정의

- 수립된 한국형 복지재정모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정도

< 계산식 > (∑ 5점 척도 중 답변 점수) / 답변자 수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소요를 재정에서 흡수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가 과제의 핵심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분배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모델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 또한 벤치마킹할 대상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만드는 모델인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 평가결과 5점 척도상 3.5점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 여부 측정

과제 1-4. 방과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방과후 활동 수혜율

	(%)							
	'01	'02	'03	'04	'05	'06	'07	'08
▪ 방과후 활동 수혜율	-	-	-	-	1.5	5	10	15

□ 성과지표의 정의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동안 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학령기(6~17세) 아동·청소년 비율

< 계산식 >

$$* \text{방과후 활동 수혜율} = \frac{\text{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아동수}}{\text{전체 아동·청소년수(6~17세)}}$$

- * 방과후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 학교(교육부), 방과후 보육(여성부),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공부방(청소년위)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빈곤의 대물림 방지, 교육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 필요성 대두
- '06년부터 방과후 학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대상아동을 '05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 설정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6년 예산집행실적 점검시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아동수 조사

과제 1-4. 방과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사회적 일자리 수

(만명)

	'01	'02	'03	'04	'05	'06	'07	'08
▪ 사회적 일자리 수	-	-	-	5	7	13	16	18

□ 성과지표의 정의

-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 수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나 최근 수년째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고 있고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미흡한 실정
- 따라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산모도우미 지원, 호스피스 사업 등 신규사업은 최대한 발굴·지원
 - * 계속 : 방문도우미(복지부) 7→13천명, 사회적일자리제공(노동부) 4→6천명 등
 - 신규 : 산모신생아 도우미(복지부) 112천명 등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6년 예산집행실적 점검시 사회적 일자리 수 조사

과제 2-1.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 목표 대비 실적

(%)

	'01	'02	'03	'04	'05	'06 ('07예산안)	'07	'08
▪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	1.9	3.0	2.5	9.0	8.0	8조원 이하	좌동	-

□ 성과지표의 정의

○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지표

- 일반회계의 국채 발행 규모
= 일반회계 총계 - 국세수입 - 세외수입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07년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를 '06년 예산 수준(8조원) 이하로 관리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7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 측정

과제 2-1.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

국가채무규모 목표 대비 실적 - IMD 평가지표(2.1.3/2.1.4) 및 WEF 평가지표(2.20) -

	(%)							
	'01	'02	'03	'04	'05	'06 (’07예산안)	'07	'08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19.5	22.9	26.1	30.4	31.7	31.7% 이하	좌동	-

☐ 성과지표의 정의

○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지표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 / 경상 GDP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07년말 국가채무 규모를 '06년말 수준(31.7%) 이하로 관리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7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 규모 측정

과제 2-1.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

세출구조조정 목표치 대비 실적

(%)

	'01	'02	'03	'04	'05	'06 ('07예산안)	'07	'08
▪ 구조조정 목표치 대비 실적	-	-	-	-	-	75	80	-

□ 성과지표의 정의

○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지표

- 전체 세출예산 중 의무적 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 대비 구조조정 목표치(10%)*의 75% 수준 구조조정

* 의무적 지출 : 인건비, 교부금, 채무상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 지출
(기초생활보장, 보훈보상금, 직불제 등)

$$* \text{구조조정 목표치}(10\%) = \frac{\text{구조조정(완료 또는 감액) 금액(일반+특별회계)}}{\text{전년도 재량적 지출규모} - \text{자연완료} \cdot \text{감소사업 규모}}$$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05년에 설정한 연차별 목표에 따라 '06년 목표 설정

- 재량적 지출의 10% 수준을 최종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추진목표를 상향 조정

('05년 : 최종목표치 대비 70% → '06년 : 75% → '07년 : 80%)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07년 정부예산안에 나타난 구조조정 실적 측정

과제 2-2.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평가

	(%)							
	'01	'02	'03	'04	'05	'06	'07	'08
▪ 전문가 평가	-	-	-	-	90.1 ¹⁾	90.0	90.0	90.0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 성과지표의 정의

- 성과관리대상 확대, 성과관리 교육 강화,
자율평가·심층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계산식 >

$$* \text{전문가 평가} = \frac{\sum (\text{긍정적 답변문항 수}) / (\text{총 문항 수})}{(\text{설문 답변자 수})} \times 100$$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성과관리제도는 도입초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한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 매년 개선효과가 높은 90% 수준 유지

* 미국의 경우에도 '02년 PART제도 도입 등 현재에도 지속 보완 중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성과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성과관리관련 연구기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원, 부처 공무원 등

과제 2-3.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제도개선방안의 확산여부

	'01	'02	'03	'04	'05	'06	'07	'08
▪ 제도 확산 부처수	-	-	-			4개		

□ 성과지표의 정의

- 기획처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주무부처의 제도 확산여부를 통해 성과를 평가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 착수, 진행, 완공까지 단계별 점검 강화
- 기획처 주관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가 주요 4개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
 - 정보화·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평가 제도 도입 : 정통·과기부
 - 수요예측 재검증 의무화 제도 도입 : 건교·해수부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관하는 4개 부처(정통·과기·건교·해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확산 여부 점검

과제 2-4.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규모

(조원)

	'01	'02	'03	'04	'05	'06	'07	'08
▪ BTL 민자사업 추진규모 (고시기준)					2.5	5.4		

□ 성과지표의 정의

○ 민간투자방식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총규모

* 임대형 민자사업 : 민간의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유치가 불가피

▪ 자체 수익성이 없는 교육·복지·문화시설 등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

* 도로·항만 등 최종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

⇒ 국회에 보고('05.11.23)된 한도액 5.7조원 중 예비한도액(0.3조원)을 제외한 5.4조원을 유치 목표로 설정

* 지자체 자체사업(2.6조원) 및 예비한도액(0.3조원) 포함시 8.3조원 수준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임대형 민자사업 계획(5.4조원) 대비 고시규모('06.12월말 기준)

과제 2-4.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민간투자제도(BTO 및 BTL사업) 개선 건수

	'01	'02	'03	'04	'05	'06	'07	'08
▪ 민간투자제도개선 건수						3건		

☐ 성과지표의 정의

-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BTO 및 BTL제도 개선 건수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향후 운영수입 보장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실시협약 체결예정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필요

* 현재 45개 국가관리사업중 33개 사업에 대해 운영수입 보장

- BTL사업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비용 보상제 도입을 통해 참여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BTL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성과요구수준서 수립 필요

* 성과 요구수준서 : 설계·건설·운영 등의 단계에서 사업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한 기록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운영수입보장제도·제안비용보상제·표준성과요구수준서 개선·마련 여부를 점검

과제 3-1.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시장원리 확대부처 비중

	'01	'02	'03	'04	'05	'06	'07	'08
▪ 시장원리 확대 부처 비중	-	-	-			30		

(%)

□ 성과지표의 정의

- 시장원리 확대방안의 구체적 추진지침에 따라 재정사업에 아웃소싱, 바우처 등을 확대실시·신규도입하는 부처의 비중

< 계산식 >

$$* \text{확대부처 비중} = \frac{\text{아웃소싱 및 바우처 확대 또는 신규도입하는 부처수}}{\text{전체 부처}}$$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시장원리”란 경쟁, 선택, 참여 등 시장경제의 주요요소가 포함된 재정운용 방식으로 아웃소싱(경쟁), 바우처(선택) 등이 있음

※ OECD 정의 : MTMs (Market Type Mechanisms)

- 제도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선시행부처(전체 30% 수준*)를 선정하여 '07년부터 1단계 도입
 - 예산규모, 시장형성 정도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의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선정

* 집행업무 위주의 중앙관서의 수(17개) / 예산 수반 중앙관서의 수(61개)
: 전체 중앙관서 대비 집행업무 위주의 ‘청’단위 관서 비율수준으로 목표설정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시장원리 확대방안 세부지침」에 준거하여 아웃소싱 및 바우처를 확대실시·신규 도입하는 부처 수를 측정

과제 3-2.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① 공공기관운영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01	'02	'03	'04	'05	'06	'07	'08
▪ 국민·전문가 수용도						50%이상		

□ 성과지표의 정의

- 공공기관운용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전문가의 수용도

$$\text{수용도}(\%) = \frac{\text{운용시스템 개선에 동의하는 응답 수}}{\text{전체 응답 수}} \times 100$$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동 법안은 부처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과제로서 이견 최소화를 위한 의견수렴 자체가 핵심관건
- 법안 입법과정에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간 쟁점을 해소해 나갈 필요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입법예고 후 18개월 소요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전문가 수용도 조사

과제 3-2.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②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정보 확대

(건)

	'01	'02	'03	'04	'05	'06	'07	'08
▪ 평균 정보공개 수					20	22	24	27

□ 성과지표의 정의

-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경영정보 공개 포털”에 제공하는 공개정보 수

< 계산식 >

$$* \text{평균 경영정보 공개 수} = \frac{\text{공공기관별 경영정보 공개 대상 수 합계}}{\text{공공기관 수}}$$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06년도 경영정보 공개 대상수를 '05년보다 10% 높게 설정
 - 목표 정보공개 수 = 전년도 평균 정보공개 수 × 1.1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경영정보 공개 포털”에서 기관별 정보공개 수 확인

과제 3-2.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③ 공공기관 혁신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점)

	'01	'02	'03	'04	'05	'06	'07	'08
▪ 혁신프로그램 만족도	-	-	-	-	64.6	68.1	71.3	74.2

□ 성과지표의 정의

○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혁신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

< 계산식 >

$$* \text{혁신프로그램 만족도} = \frac{\text{응답결과 평균 값}}{\text{응답자 수}}$$

* 혁신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설문조사
(매우 불만 : 0점, 약간 불만 : 25점, 보통 : 50점, 약간 만족 : 75점,
매우 만족 : 100점)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05년도 참가가 만족도 보다 10% 높게 설정

$$* \text{'06년 목표} = \text{'05년 점수} + (100 - \text{'05년 점수}) \times 10\%$$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06. 11월)

과제 3-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혁신과제 5.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완성도

	'01	'02	'03	'04	'05	'06	'07	'08
시스템 및 정보의 통합·연계 정도	-	-	-	-	-	100	-	-

(%)

□ 성과지표의 정의

○ 재정시스템 및 재정정보의 통합·연계 정도

- 목표시스템 완성, 시스템을 통한 재정정보 산출·제공 등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당초 목표 시스템 구성도에 맞게 시스템들이 통합·연계 구축되었는지 여부

- 중앙재정,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독자시스템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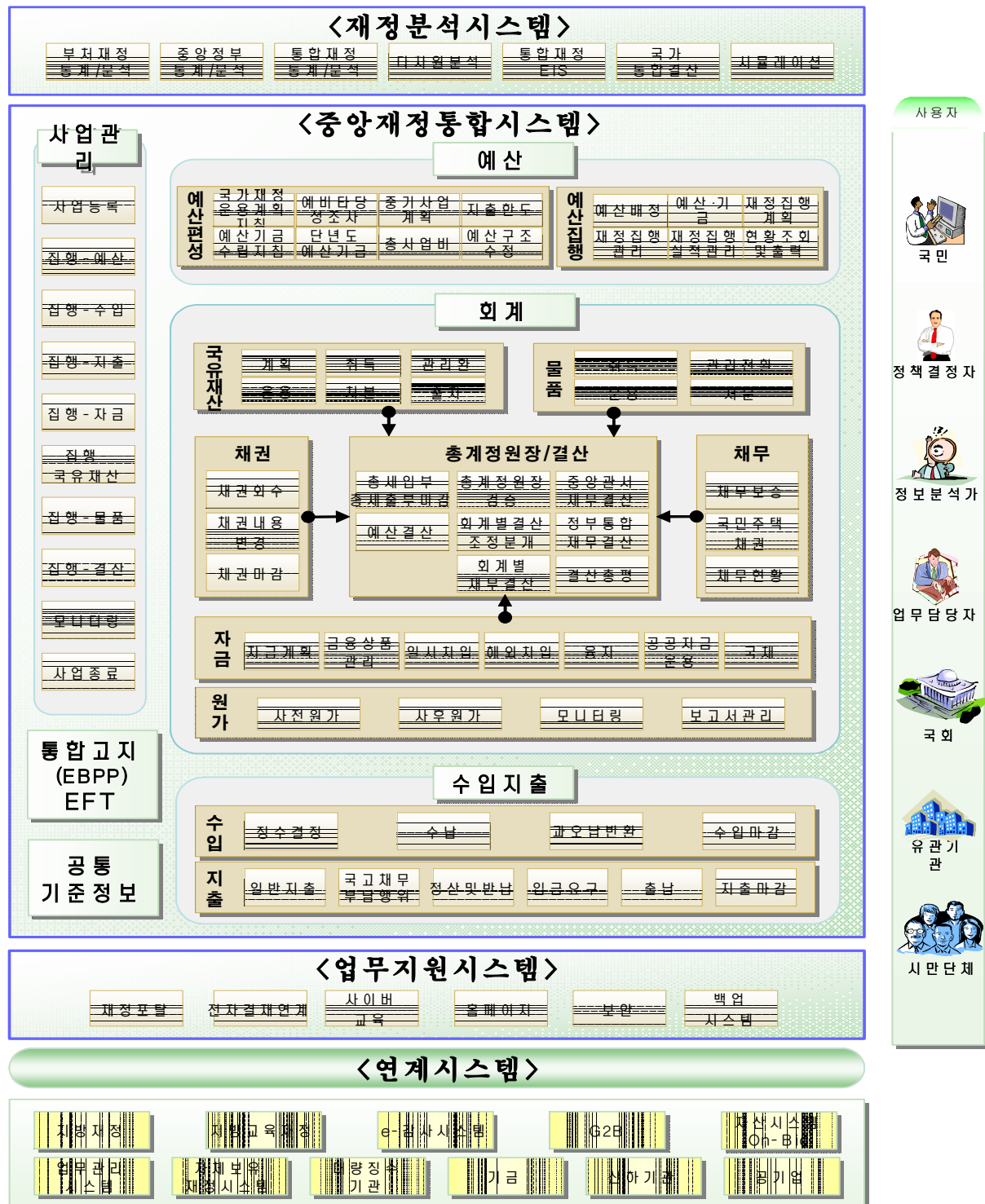
○ 시스템에서 제공하려는 정보의 연계·산출 여부

- 세입,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재정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서 산출·제공
- 사업정보,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정보 제공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구축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하여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감리 실시

<참 고> 목표 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국민

 정책결정자

 정보분석가

 업무담당자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국민

정책결정자

정보분석가

업무담당자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과제 3-4.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시스템 구축 진척도

	(%)							
	'01	'02	'03	'04	'05	'06	'07	'08
▪ 시스템 구축 진척도	-	-	-	-	-	100	-	-

□ 성과지표의 정의

- 장단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진척도

- 목표 : 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전망을 통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
 ② 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재정의 단기 위험요인 분석
 ③ 재정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최근 미래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제도의 확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재정의 장단기 위험요인이 증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장단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II. 혁신과제

과제 1. BTL사업을 대표적인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및 시행비율

	'01	'02	'03	'04	'05	'06	'07	'08
▪ 주민참여 방안 마련 여부	-	-	-	-	-	방안 마련		
▪ 시행비율						100%		

□ 성과지표의 정의

-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BTL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제도화

$$\text{시행비율(\%)} = \left\{ \frac{\text{주민참여 방안이 포함된 사업 건수}}{\text{고시된 사업 건수}} \right\} \times 100$$

* 제도화 완료 후 고시된 사업 기준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BTL사업은 주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교육·복지·문화시설로서 실제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반영이 절실하나 제도 미비

※ 일본의 경우 PFI법과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의 이해·동의·협력, 고객만족도 조사 등 규정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제도화(BTL 사업 시행지침 등 개정) 여부 점검
- 제도마련 후 시행건수 확인

과제 2.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재정신뢰도의 개선도

(%)

	'01	'02	'03	'04	'05	'06	'07	'08
■ 재정신뢰도 개선도	-	-	-	(6.0 ^{1」})	(5.1 ^{1」})	25		

1」 '05.6월에 실시한 재정수요조사 결과보고서상의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평가”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 비율”

□ 성과지표의 정의

- 예산낭비 신고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 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예산낭비 등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신뢰 개선도를 측정

$$\text{■ 재정신뢰개선도} = \frac{(\text{하반기 긍정적 답변비율}^*) - (\text{상반기 긍정적 답변비율}^*)}{(\text{상반기 긍정적 답변비율}^*)} \times 100$$

* (긍정적 답변자 수 / 전체 조사 대상자 수) × 100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고질적 예산낭비 등으로 재정에 대한 대국민 불신 만연
 - ⇒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 및 예산낭비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필요
-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전반 및 예산낭비절감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측정하여 개선도를 파악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예산낭비신고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과제 3.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정책품질관리 강화

「균형발전지수」 개발 및 지자체·전문가 만족도

	'01	'02	'03	'04	'05	'06	'07	'08
▪ 「균형발전지수」 개발	-	-	-	-	-	개발		
▪ 지자체·전문가 만족도						50%		

□ 성과지표의 정의

- 지역간 균형발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수」 개발 여부
- 지역간 격차의 현상 진단과 성과관리 척도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지자체 및 전문가의 반응 정도

< 계산식 >

* (긍정적 답변자 수 / 전체 조사 대상자 수) × 100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균형발전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수 필요
- 정책적·학문적 활용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의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계량화된 「균형발전지수」 개발 여부 확인
- 설문에 의한 지자체 및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 조사

과제 4. 부처와 재정당국간 예산협의 모델 개발

부처·기획처 직원 만족도

(점)

	'01	'02	'03	'04	'05	'06	'07	'08
▪ 부처·기획처 직원 만족도	-	-	-	-	-	55	60	65

□ 성과지표의 정의

○ 예산 편성·협의과정에 대한 부처와 기획처 직원의 만족도

< 계산식 >

- 부처·기획처 직원의 만족도 = $\frac{\text{응답결과 평균 값}}{\text{응답자 수}}$
- 각 부처 예산담당자·기획처 직원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조사
(매우 불만 : 0점, 불만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 만족 : 100점)

□ '06년 목표 설정의 근거

- Top-down 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 재정운용혁신을 위해 업무처리절차 효율화로 부처·직원 만족도 제고 필요
- '06년 일하는 방식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55점 달성, 이후 연차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 지표 측정(검증) 방법

- 부처와 기획처 직원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별첨 1]

2006년도 입법추진계획

1.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추진 배경

- 현행 예산회계법(61년 제정)에 근거한 기존의 단년도·투입·통제위주의 재정운영방식으로는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데 한계
- ⇒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 마련

□ 법안의 주요내용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개혁과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 재정정보 공표 확대 등 재정의 투명성 강화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05. 4. 22일 국회 운영위에 상정후 현재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 소위 결정으로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안과 한나라당안(「국가건전재정법안」)간 절충안 마련 중
 - 핵심 쟁점(국채 탄력발행, 국가채무 범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절충안이 잠정 마련된 상태
-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 추진 배경

- 금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망
 -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06. 1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
- 특별법(안) 규정에 근거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계정신설 추진
 - * 권한이양분 및 국고보조사업은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 가능(법안 제79조)

□ 균특법 개정안 주요내용

- 균특회계 내 별도의 계정(가칭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을 신설하여 제주도 지역 대상 보조사업을 총괄 지원
 - * 지원범위 : 제주도 국고보조사업과 특별행정기관 정비 및 국가사무이양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도 마련
 - 국고보조사업은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예산운용절차를 적용
 - 특별행정기관 정비 및 국가사무 이양분은 업무수행 방식 등에 따라 재정운영방식 조정
- '07년 1월부터 시행 : 균특회계로 '07년도 제주도 재정사업 지원

□ 추진 계획

- '07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추어 '06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3. (가칭)공공기관운용기본법 제정추진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배구조 혁신방안 마련('06.1월)
- 혁신방안에 따라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공공기관운용기본법을 제정,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의 틀 마련

□ 법안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및 기관유형분류의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형별로 일관된 관리원칙 적용
- 공공기관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과평가·경영공시·설립심사 등 외부평가·감독체계를 일원화
- 이사회에 권한 강화(기관장 해임건의 등), 임원평가제도 신설 등을 통해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 계획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가칭) 공공기관운용기본법안」 제정 추진
 -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설득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혁신방안과 법안에 대한 설명노력도 병행

[별첨 2]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I. 자체 점검결과 총괄

□ 기획예산처 소관 주요 지시사항은 추진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

총지시사항	추진완료	종료요청중	추진중
95건	53건	23건	19건

II.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과제)

연 번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지시일)
1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재원은 기존의 재원 한계에 묶이지 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별도의 대책으로 검토	□ 재원대책 검토 ○ 기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또는 폐지로 세수확대 추진 □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희망한국21」 재원마련 ○ '06~'10(5년간) 「희망한국21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 추가 재정 소요 조달을 위해 3.1조원 국비 세출 구조조정 완료 ('05. 11월) □ 향후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재원대책 마련 ▪ '06.1 기본계획 작성 및 공청회 추진 ▪ '06.2월 기본계획 확정 및 국무회의 심의	'05.11

연 번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지시일)
2	국가채무 가이드라인 으로 GDP대비 30%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 국가채무는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30%수준에서 관리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추진실적 ○ '05 추정, '06 예산안, '05~'09 국가 재정운용계획 ▪ 국무회의 보고(9월), 국회 제출(10월) ○ '05~'09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는 중기적으로 GDP대비 3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반영	'05.8
3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과 정부기능 연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추진	☐ 범 정부 기구인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구성('04.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BSP) 수립('04.11)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전략 (BPR/ISP) 수립('05.9)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편 ▪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도입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 ☐ 시스템 본격 구축 착수('05.10) ○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삼성SDS 컨소시엄)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계속) ○ 행자부 기능연계시스템(BRM)과의 연계 추진 ○ 통합국정평가시스템(국조실)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계속 추진중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완료 ('06.12)	'04.3

연 번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지시일)
4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위기가정, 아주 불쌍한 가정의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	☐ 치매, 중증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대책 발표(희망한국21, 9.26) ○ 차상위, 서민 노인 대상 실비요양 시설을 향후 3년간 110개소 신축 ○ 향후 3년간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터 180개소 등 신축 ○ 향후 3년간 장애인생활시설 250개소 신축 ○ 차상위 중증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비 시설 입소비 지원 ○ 차상위 중증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보미 바우처제도 도입 ☐ 치매, 중풍노인들에게 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 보장법 입법 추진중(복지부)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금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실시, '08.7 본 제도 도입 예정	'05.5
5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통일되고 단호한 기준을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제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제도개선방안 마련(5~8월) ○ 업무추진비 사용용도의 제한 및 회계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용도제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감축하고, 절감재원으로 직무수행경비를 인상하는 방안 검토 ○ 국회, 감사원, 주요 관계부처 의견 수렴(7월)	'05.4

연 번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지시일)
		☐ 제도개선 방안 확정 및 '06년도 예산안에 반영(9월) ☐ '06년 업무추진비 소요 대비 20% 수준 감액 ☐ 10%는 완전삭감, 10%는 월정직책급 등 기본사업비로 활용 ☐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및 회계처리 방식 등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6	기획예산처는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 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기관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적극 유도 ☐ 추진실적 ☐ '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완료('05.6.20) ☐ 성과급 지급률 차등 폭을 확대 (278→300%)하는 등 성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를 강화하여 기관의 효율성 제고 유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운영(11월부터) → 경영정보의 투명성 보장 ☐ 312개 공공기관의 정/현원, 인건비, 재무현황 등 경영정보 공개(주·토공 포함)	'05.4

[별첨 3]

참여정부 이후 신규·계속·폐기 정책

1. 참여정부 들어 신규 발굴·시행한 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고
세출 구조조정	☐ 세출예산중 의무적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추진 * 의무적 지출 : 인건비,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축소 · 폐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 '06년 예산편성시 재량적 지출의 9.3% (4.2조원) 구조조정 ☐ '0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 참여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맞게 예산·회계 제도를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결정 ('04.3월 국정과제회의) ○ 재정통계 작성범위 재설정, 프로그램 예산제,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마스터플랜 마련('04),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 수립('05)을 거쳐 시스템 개발중 ☐ '06년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07년부터 가동할 계획	
특별회계·기금 정비	☐ 재정구조의 복잡다기화,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05년 특별회계·기금 정비 추진 ☐ '05년중 7개 특별회계, 6개 기금 관련 18개법 개정 및 폐지 추진 * 8개 국회계류, 10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진행 ☐ '07년 예산안부터 정비결과를 반영할 예정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국정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전략적 자원배분 도모 ○ '04년부터 수립, 매년 수정·보완되는 연동계획 ○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분야별 작업반, 공개토론회,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재원배분 원칙 및 방향 설정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Top-Down 제도)	☐ 재정당국(총량배분)과 각부처(자율편성)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자율성 제고 ○ '03년 시범실시 이후 '04년('05예산)부터 전면실시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기금 편성이 연계됨으로써 전략적 재원배분 실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 ○ '05년 예산 5.5조원 → '06년 예산 5.9조원 ☐ 향후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뒷받침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 '05년부터 균형발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시행('06년 예산편성시 적용) ☐ 전체 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을 분석 → 재정사업의 투자규모 등을 결정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고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	☐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03년부터 시행 ○ 건교부, 교육부 등 26개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 ☐ 범정부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06년부터 전부처로 확대 시행할 계획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하고자 '05년 도입 ○ 매년 각 부처 주요 재정사업의 1/3씩 평가 (사업별 3년 주기) ☐ '05년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 → 약 1.4조원 예산 절감 ☐ 향후 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할 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 재정운영 과정에서 심층검토가 요구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 ○ 매년 15~20여개 사업을 선정, KDI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평가 ☐ 향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할 계획	'06년 예정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국회 등의 예산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내 예산낭비대응시스템 부재 ○ '04년 부처·지자체·공기업에 예산 낭비신고센터 설치 → 신고에 대응 ☐ 예산낭비대응팀 신설로 각 기관(300여개)의 예산낭비신고 처리실적 종합, 점검('05.5) ☐ 예산낭비사례 신고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 ('06.1월)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고
공공기관 혁신평가	☐ 기관별 혁신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전략 수립 ☐ 212개 기관에 대한 혁신진단 실시('05. 5) ○ '06년부터 혁신평가를 경영평가에 통합 시행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반영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중 ○ 관리대상 기관을 확대(102→314개)하고 내·외부 견제 시스템 등을 재설계 ☐ '06년중 관련법 제·개정 추진 예정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 정부산하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03. 12) ○ 87개 기관에 대해 최초로 경영평가를 실시('05. 6)하고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 향후 평가단 보강, 평가지표개선 등을 통해 제도 정착 추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시행	☐ 정부산하기관 예산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시행('05. 3) ☐ '06년에는 '클린 카드제' 도입 등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인건비 증가율을 제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일괄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감시체계 구축('05. 12) *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마사회 등 314개 전체 공공기관 * 공개정보 : 조직, 인사, 재무 등의 경영정보 및 채용, 입찰 등의 생활정보 ☐ 향후 추가 정보공개, 시스템 재설계 등 추진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 고
연기금 자산운용 시스템 개선	☐ 연기금 자산운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금운용평가('00), 기금의 국회 심의·의결규정 마련 및 연기금투자폴 제도 도입('01), 기금여유자금 운용지침 마련('02) ☐ '05년 중 주식·부동산에 대한 원칙적 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자산운용체계 정비 ○ 자산운용위원회 구성(4.27 완료), 기금별 자산운용지침 작성(7.27) 및 국회제출(8.10) ☐ '06년중 자산운용평가기준 개편(1월) 및 기금자문 및 교육 강화 추진(연중) ○ 기금을 성격·규모별로 구분, (대형연금성, 대형사업성, 중형, 소형) 각각의 평가기준을 마련	
연기금 투자폴 운용 효율성 제고	☐ 중소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폴제도 도입('01) ○ 운용자금 차등 배분·환매 제도 도입('02.7월) 및 리스크관리개선방안 마련('03.12월) ○ 주간운용사 권한 강화 및 예탁대상 확대('04.2월) ○ 채권형 Universe 및 하위운용사 Due Diligence 제도 도입('04.8월) ☐ '05.10월 연기금투자폴 제도개산방안 심의·의결 ○ 주간사 성과평가 방안 도입, '05.11.29일 연기금 투자폴 주간사 재선정 완료 ☐ '06.1.5일부터 개편된 체제로 투자폴 운영하고 주간사 성과 평가실시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고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시행	☐ 민간의 자금과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긴요한 교육·복지·문화시설 등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간투자방식(BTL) 도입 ○ 민투법 개정완료('05.1), 시행모델 개발 및 지침·매뉴얼 마련('05.5), ☐ '05년말 현재 86개 사업, 3.8조원 규모 BTL사업 추진 ☐ '06년 8조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예정 ○ 제도 내실화 및 학교 복합화 등 성공사례 창출 중점 추진	
총액인건비제	☐ 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05년 도입 ☐ 주요내용 ○ 인력 : 총정원의 3% 범위내 자율 결정 ○ 보수 : 성과급 등 항목 자율결정 ○ 예산 : 인건비 및 인력운영예산, 기관운영예산간 자율성 확대 ☐ '05~'06년 8개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 시범실시 '07년 전면 도입 계획	

2. 참여정부 들어 신규 시행하였으나, 이후 내용이 변한 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고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	☐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에 후보 공모원칙 정립 *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 쇄신지침('03.4.15),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04.3.10),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04.4.1) ☐ 시행과정에서 기존 공모제는 우수인재 선발 효과 미흡(응모기피, 빈번한 재공모 등) ☐ 기관별 선발 절차 다양화, 자·타천 병행 등 공공기관 기관장 공모제 개선방안을 마련 * 법령 범위내에서 공모여부 결정 등 선발절차 다양화, 공모시 타천병행, 3차공모 생략 가능 등 ☐ 개선방안을 반영,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을 시행('06.1월 중)하고, 각 주무부처·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정관 등 개정 추진	'06년 변경

3. 참여정부 들어 종료·폐기한 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 2004년 종료 ☐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균형발전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교부세율 인상 및 균특회계 신설	

4. 참여정부 이전에 시행되어 계속 시행중인 주요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 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내실화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SOC시설의 조기확충,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 ('94년 민간유치촉진법 제정) ○ 그간,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사업은 총 45개, 약정총투자비 33.5조원 ☐ 제도 도입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간투자사업 내실화에 중점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기반 시설 위주로 대상시설 확대('05.1) ○ 인프라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99년 도입 ○ 추정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 향후 조사대상을 정보화분야 등으로 확대할 계획	
총사업비관리제도	☐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비 증가억제 및 품질 관리를 위해 '94년 도입 ○ 대규모 건설사업(토목 500억, 건축 200억이상)의 총사업비 관리 ☐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계획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고
공공기관 경영혁신	☐ 자율·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시행중('98년부터) ☐ '05년부터 개별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 ○ 공공기관혁신교실운영, 우수사례집 매뉴얼 발간, CEO토론회 개최 등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및 사후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83.12)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과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급률 격차(최고-최저) : ('02) 142 → ('03) 278 → ('04) 300%P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중심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 '99년 도입 * 17개 기관 평균 : ('99) 58.1, ('01) 66.5, ('03) 76.8, ('04) 79.4, ('05) 80.6점 ☐ '05년부터 전체 경영혁신 대상기관으로 확대 시행 (산하기관 75개, 출연(연) 등 기타 97개 기관)	
부담금 관리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본틀 마련('01.12) ○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 ☐ '06년 각 부담금의 운용성과를 평가, 정비 추진 예정	
기금평가	☐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99.12) ○ 3년주기 기금평가제도 도입('03.12) ☐ 준치평가결과에 따라 6개 기금을 정비 추진중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고
보수체계계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 생산성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로 전환 ○ 저호봉대 보수를 높이고, 고호봉대 보수를 낮게 인상하도록 차등 인상 ☐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 ○ 기말수당, 정근수당(100%)를 기본급에 통합	
책임운영기관제도	☐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구분 ○ 행정형은 일반회계, 기업형은 특별회계 적용 ☐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 일정계급이하의 종류·계급별 정원 통합운영 ☐ 예산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 초과수입금의 사용범위 확대, 기관장에게 예산의 전용권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회전자금 공동사용 가능	
재정집행 자율성	☐ 각 부처가 자율과 책임원리에 따라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자율성 확대 ○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예산배정, 전용권을 부처에 대폭 위임, 예산비목체계 단순화	
국고보조사업 정비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 국고보조사업 163개(1.1조원) '05년부터 지방이양 * 일반행정분야 147개 9,581억원 - 교육분야 16개 1,900억원 ○ 소요재원은 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교부세율 0.83% 인상)	

[별첨 4]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상황 점검

1. 이행상황 점검결과 총괄

□ 장애인, 여성,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법적의무·권장사항과 친환경상품 구매 등은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

○ 다만, 기능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채용비율 및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의 경우 결원발생이 적어 목표달성에 미달

○ 장애인생산품의 경우 불필요한 품목구입과 타 법상 의무구매 품목도 구매비율 산정 기준에 포함 되어있어 구매 실적이 다소 부진

2. 항목별 이행상황

의무/권장사항	추진 상황		비고
	의무/권장 목표	'05년말 이행현황	
장애인고용비율 확대	- 정원의 2%(7명)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04년 7명→'05년 8명(14%증) * 의무고용비율달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장애인충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 기능직정원의 10%(4명)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04년 2명→'05년 2명 * '05년 기능직공무원의 결원이 없었던 관계로 충원실적 없음	결원발생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계획
5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05년 11명(누계)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04년 7명→'05년 12명(71%증) *'05년 신규채용, 타부처 전입을 통한 충원	'05년 수습사무관 배정시 여성 우선 요구

의무/권장사항	추진 상황		비고
	의무/권장 목표	'05년말 이행현황	
4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임용확대	▪ '05년 3명(누계) *4급이상 기술직 이공계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	▪ '04년 5명→'05년 5명 * 부처간 인사교류시 기술직 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등 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05년 20명(누계)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04년 19명→'05년 18명	신규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
친환경상품우선구매 (환경마크상품, 재활용제 품 통합)	환경기술개발에관 한법률 제29조 자원의절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38조 해당품목 우선구매	환경마크제품 및 재활용제품 최대한 우선구매(98.3%)	복사용지 등 1,160백만원 구매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중소기업진흥법 제9조 해당품목 우선구매	해당되는 물품 및 용역에 최대한 우선구매(85%)	프린터, 연구용역 등 6,422백만원 구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해당품목 우선구매	▪ '04년 하반기 - 6개 품목 중 필요물품 4개 품목 구매 ▪ '05년 상반기 - 17개 품목 중 필요물품 6개 품목 구매	행정봉투 등 61백만원 구매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비율	서울지방조달청사 임차 사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별첨 5]

2005년 정책목표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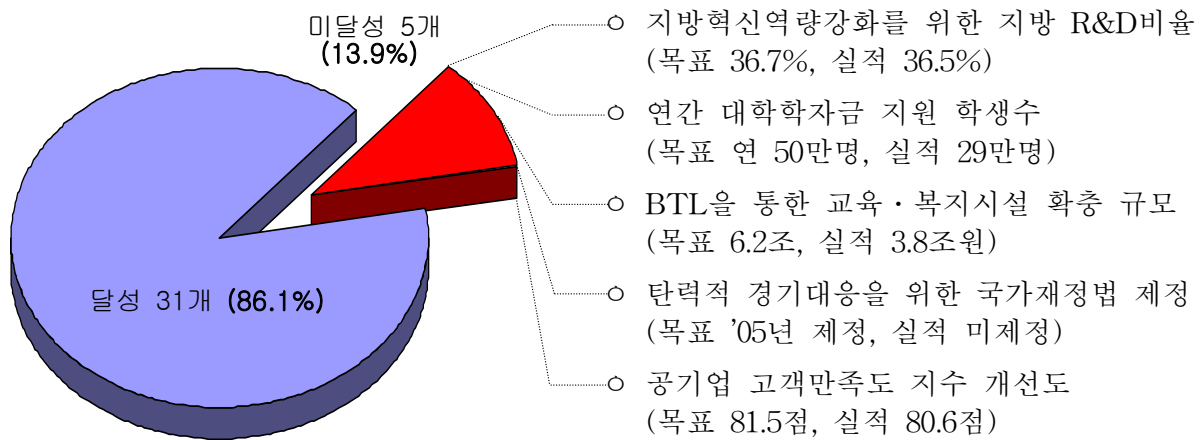
【2005년도 5대 정책목표 추진성과와 반성】

□ 총 36개 지표중 31개를 달성(86.1%)

○ 국가재정법 제정 지연 등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06년 지속추진 노력

**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

총 36개 지표



성 과

반 성

1.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 중기적 전략하에 Top-down 자원배분

▪ 국회심의단계까지 Top-down 적용한계

2. 국민 기본수요 충족과 형평증진

▪ 교육·주거·의료·보육 등 기본수요 투자에 본격 착수

▪ 정부·시장간 역할분담 등 제도개선 미흡

3.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 분석 체계 구축, 경제회복지원

▪ 국가재정법 제정 지연, 제도적 기반 미확충

4.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 운영

▪ 종합성과관리체계 구축 (목표·지표관리→지출평가→개별 사업평가→예산낭비대응)

▪ 국민체감 사례는 아직 미흡

5. 공공부문 재정투명성 제고와 혁신활성화

▪ 경영정보 공개 등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혁신지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혁신유도 한계

정책목표 1.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 주요성과

- 새로운 국가재원 배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
(공개토론회 →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자율편성)
- * 그 결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마련, 10% 세출 구조조정 등 추진
- 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재정소요 전망 작업 착수

□ 미흡한 점

-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Top-down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종전 심의방식 답습

<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 중장기 재원배분 전략에 대한 합의 도출	· 공개토론회 및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 개최 · 재정지출원칙 합의	개최여부 합의여부	토론회13회, 재원배분회의1회 12대원칙합의
▪ 10% 세출 구조조정 추진	· 구조조정 실적	7%	9.3%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전문가 만족도 평가	50%	57%
▪ 지방의 혁신역량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 지방R&D비중	36.7%	36.5%
▪ 각 부처 중장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 협의절차 준수비율	80%	100%

정책목표 2.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 주요성과

○ 복지투자의 기본원칙과 장기 청사진을 최초로 마련

* 복지지출 비중 : ('05) 19.7% → ('30) 46.7%

○ 교육·주거·의료·보육 등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에 본격 착수

*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BTL 도입 ('05년 86개사업 3.8조원 추진)

□ 미흡한 점

○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정부·시장간 역할 분담,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은 미흡

<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 국민 기본수요에 대한 투자 확대	·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비율 · 유아교육·보육료 수혜인원 · 대학학자금 지원 학생수 · 지역공공병원 기능 확충	33% 57만명 50만명 20개소	45.4% 69만명 29만명 22개소
▪ BTL을 통한 교육·복지시설 조기 확충	· BTL사업 추진규모	6.2조원	3.8조원
▪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고용기회 및 복지서비스 확충	· 연간 지원 인원 · 상반기 사업진도율	4만명 81.2%	4.1만명 100.1%
▪ 국민합의·채원대책이 미흡한 입법 추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주요 법안 정부의견 반영비율	90%	90.4%

정책목표 3. 거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주요성과

-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최초로 자체 분석, '05~'09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

* 한은, 삼성연 등과 거시 '재정전망 협의회' 구축·운영

- 반기 재정운영실적을 분석, 추경 등 재정운영기조 조정 필요성 점검 체계 구축

* '반기 재정운영실적 보고',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미흡한 점

- 국가재정법 제정지연으로 경기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지연

<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 탄력적 경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국가재정법 제정	국회통과	국회계류
▪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 재정집행 진도율 · 일자리지원 상반기 집행실적 진도율	59% 81.2%	59.3% 81.5%
▪ 하반기 BTL등 종합투자계획실행	· BTO/BTL방식 민간투자규모	2.8조원	2.8조원
▪ 국민경제관점의 기금여유재원의 투자처 제공	· 위험조정 수익율	동종업계 25%이내	동종업계 16%
▪ 거시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분석기능 강화	· 분석·전망부서 · 협의체 구성 · 민감도 분석	신설여부 구성여부 실시여부	신설 구성 실시

정책목표 4.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영

□ 주요성과

- 매년 재정사업의 1/3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 * '05년에는 555개 재정사업을 평가, 1.4조원수준 구조조정
- 범정부적 예산낭비 대응체계 구축·운영
 - * 43개부처, 250개 지자체, 12개 공기업

□ 미흡한 점

- 국민이 체감하는 근본적 예산낭비 사례 제도개선 미흡
(연말 보도블럭 교체 등)

<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 전문가 만족도 평가	60%	90.1%
▪ 재정성과관리와 통합국정평가 제도의 연계 강화	· 전문가 만족도 평가	50%	90.1%
▪ 예산낭비 대응체계 구축	· 예산낭비 지적사례 제도개선 비율	50%	90.0%
▪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도 도입여부	제도 도입	제도 도입

정책목표 5.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혁신 활성화

□ 주요성과

-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범위 최초 설정 등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 첫 산하기관 경영평가 추진, 기관별 수준에 맞는 혁신지원 강화
 - * 경영평가(87개), 혁신수준 진단 최초 실시(213개), CEO 연찬회, 혁신매뉴얼 발간

□ 미흡한 점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혁신유도에는 한계

<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 재정의 통계작성범위 재설정	· 진척도 (디지털시스템 구축도)	50%	50%
▪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기반도입 진척도 (진도율)	100%	100%
▪ 공기업·산하기관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수용도	2.8점	3.1점
▪ 공기업·산하기관 혁신역량 제고	· 공기업 고객만족도 지수 개선도	81.5점	80.6점
	·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개선도	75.3점	76.5점
	· 혁신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3.5점	3.59점
▪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방안 마련	· 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표준모델 마련 여부	유형별 표준모델 마련	유형별 표준모델 마련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 부담금 인지도	3.0점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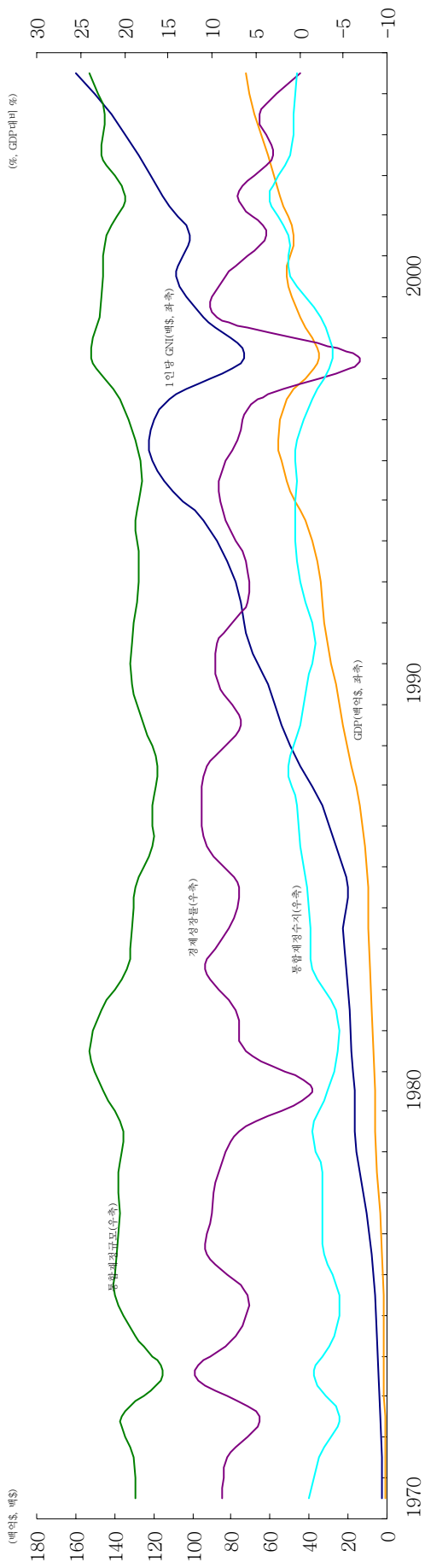
[별첨 6]

재 정 연 대 표 (정부수립~현재)

[재 정 연 대 표 (정부수립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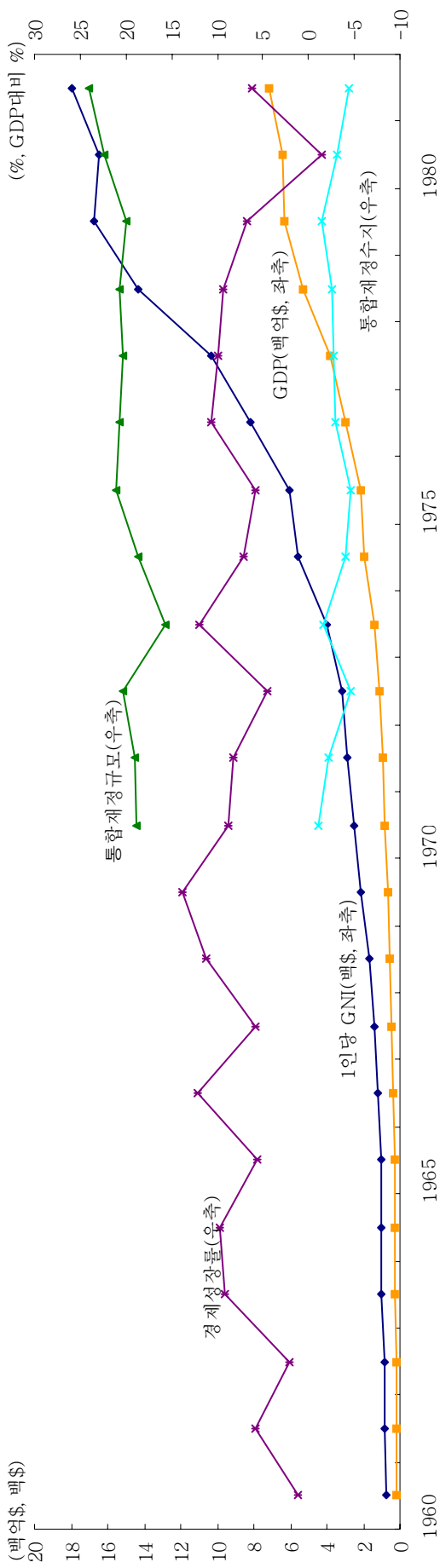
□ 총괄표

	건국·전후복구	국가주도 경제개발기		민간주도 전환기		동반성장·균형발전
	1948~61 1~2공화국	1962~1987 제3~5공화국	1988~1992 6공화국	1993~1997 문민정부	1998~2002 국민의 정부	2003~2005 참여 정부
경제·사회일반	정부수립(48) 통화개혁(53)	통화개혁(62) 1인당 GNI 1,034\$(77)	서울올림픽(88) 1인당 GNI 5,418\$(89)	IMF구제금융 지원요청(97)	IMF 조기상환(00) 1인당 GNI 10,841\$(00)	무역규모 5천억불(05) 1인당 GNI 14,162(04)
경제·재정정책	장기경제부흥계획(56) 한국경제협력회의발족(61)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62~) 82~86중기재정계획(81)	의료보험제도(88) 최저임금제도(88) 국민연금제도(88)	신경제5개년계획(93) 금융실명제도입(9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05)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04)
재정제도	경제기획원 설립(61) 예산국:재무부→기획원(61) 회계연도 변경(57) - 7~6월 → 1~12월	예산회계법(62) 단일변동환율(64) 부가가치세 도입(77)	통합재정수지흑자(87) 기금관리기본법(91)	경제기획원+재무부 → 재정경제원(94) 교통세 도입(94)	재경원→기획예산위, 재경부(98) 기획예산위,예산청 → 기획예산처 출범(99)	Top-down예산제도 도입(04) 산하기관 경영평가(04) 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05)
(일반회계 세출규모)	3,000만원(48)	4,413억원(70) 6,486억원(80) 27.4조원(90)			87.5조원(00)	134조원(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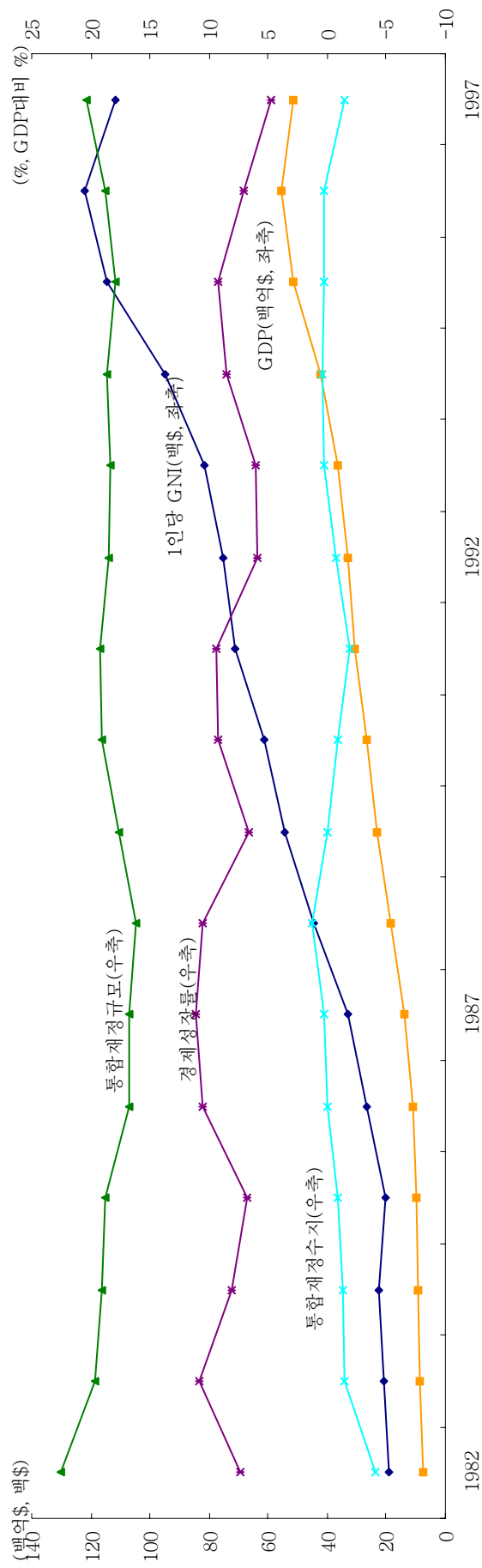


□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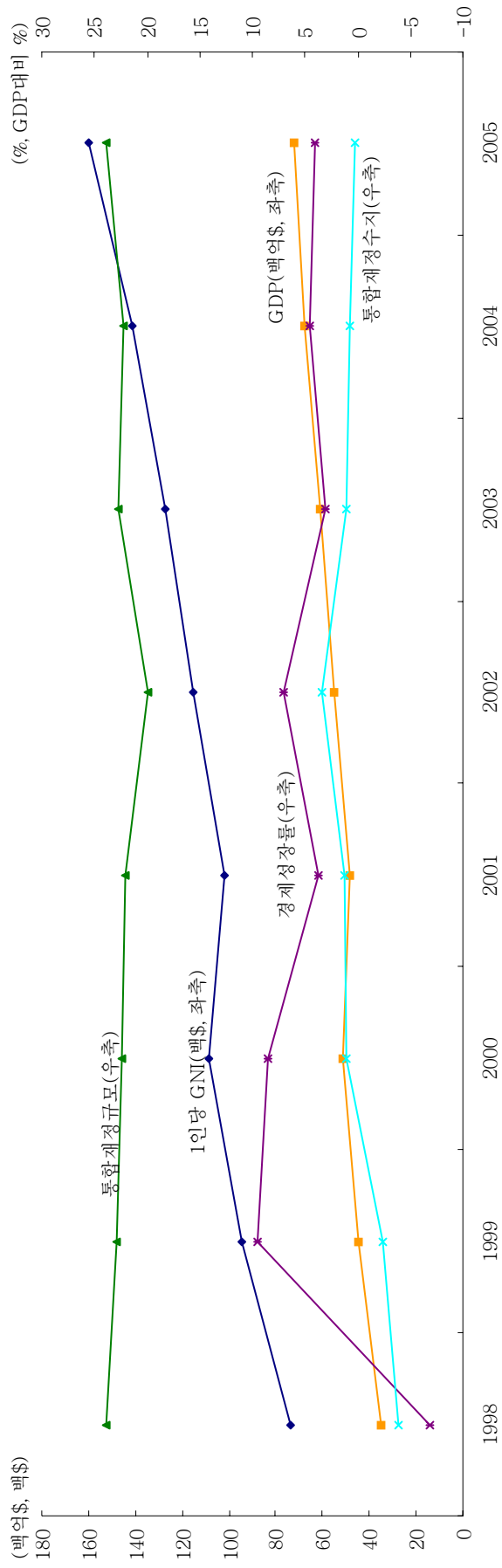
	건국 · 전후복구기		국가주도 경제개발기
	1948 ~ 1953	1954 ~ 1961	
	건국 · 한국전쟁		
	1 ~ 2공화국		
경제 · 사회일반	대한민국정부수립(48) 6·25사변(50), 농지개혁법(49) 1인당 GNI : 67불(53)	IMF, IBRD 가입(55) 4·19 혁명(60) 5·16 군사정변(61)	ADB가입(66), GATT가입(67) 경부고속도로 개통(70) 1차 석유파동(73), 수출 100억불 달성(77) 1인당 GNI : 100불(63)
경제 · 재정정책	경제부흥 5개년 계획(49) 한해에 7차례 추경편성(50)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53)	단일공정환율 제정(55) 장기경제부흥계획(56) 가예산편성(49~55)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1차)'62, (2차)'66, (3차)'71, (4차)'77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14)
재정제도	통화개혁(100원/환) 한국은행 설립(50) 재정법 실시(51)	경제부흥특별회계 신설(54) 전람수습특별회계 폐지(55) 경제기획원(EPB) 설립(61)	예산회계법 시행(62) 예비비예산의 총액편성(63) 방위세 도입(76), 부가가치세 도입(77)



	국가주도 경제개발기	민간주도 전환기	
	1982 ~ 1987 5공화국	1988 ~ 1992 6공화국	1993 ~ 1997 문민정부
	외채위기(총외채/GDP49.6%) (80~85)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소비자 보호원 설립(86) 1인당 GNI : 3천불 달성(87, \$3,321)	국민연금제도(88) 최저임금제도 도입(88) 서울올림픽(88) 1인당 GNI 5천불 달성('89, \$5,418)	WTO체제 출범(95), OECD가입(96) 지방자치제 실시(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출)(95) IMF구제금융지원요청(97) 1인당 GNI 1만불 달성('95, \$11,432)
경제 · 사회일반	5차 경제사회개발계획(8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82) 고용종합대책 수립(85)	6차 경제사회개발계획(87) 전국민 의료보험제도(88) 국민연금제도(88) 최저임금제(88)	신경제 5개년 계획(93) 금융실명제 전면도입(93) 고용보험 실시(95)
경제 · 재정정책	중기재정계획 수립(82~86) 교육채 신설(82), 영점예산 제도적용(8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83) 통합재정수지 최초 흑자(87)	재정투자특별회계 신설(88)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실시(89) 종합토지세 도입(90) 기금관리기본법 제정(9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신설(92)	경제기획원, 재무부 통합 → 재정경제원(94) 공공자금 통합관리(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정) 중기재정계획 수립(94) 교통시설특별회계 신설(94)
재정제도			



	민간주도 전환기		동반성장·균형발전	
	1998 ~ 2002		2003 ~ 2005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IMF구제금융 조기상환(00)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포철, 산은등 민영화) (00) 1인당 GNI 1만불 재달성(00, \$10,841)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01) 공적자금 관리체계구축(공적자금 관리특별법 제정12.20) (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 1인당 GNI \$14,162(04)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0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05) 희망한국 21 : 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05)	
경제·사회일반				
경제·재정정책				
재정제도	재정경제원 →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로 분리(98) 예비타당성제도 도입(99) 예산성과급 규정(99)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 기획예산처 통합(99)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00~02)		예산총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 도입(04)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도입(04) 성과관리제도 도입(0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K-PART) 도입(05)	



CREATING A BETTER FUTURE
www.mpb.go.kr



기획예산처 로고 심볼은 기획예산처가 지향하는 목표를 'K'로 이미지 형상화 하였습니다.
기존 정부부처의 관료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음양으로 형상화된 영문 'K'는 전략기획과 그것을 실천하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의미하며,
한국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선도적인 중앙부처와 세계 제일의 재정부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포지티브한 영문 'K'를 숫자 '1'로 형상화 하였습니다.